

민주 “내란수괴 尹 영구격리…내란공범 장동혁 단죄해야”

尹 옥중 메시지에 “국민 모독”…“張, ‘극우 어게인’ 완전 동화”
“내란세력 타협도 용서도 없어…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와 제언이 ‘의회 폭거’ 탓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맹비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 모독이다”면서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민주주의에 총을 겨누는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로 유감이다. 비판을 넘어 단죄 받아야 할 수준이다”며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장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전날 변호인을 통해 내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

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민주당 한정은 정책위의장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적인 야욕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무도한 세력은 그에게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윤석열이 이런 뜻깊은 국민주권의 날에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었다.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의 고의성이 있는 계획범죄임을 자인한 자백문과 다름없는 입장문이었다”면서 “엄정하게 단죄되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승찬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옥중 망언,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민 반역자의 말로는 감옥 뿐”이라면서 “일말의 반성은커녕 12·3 불법 비상계엄이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여전히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치검찰 조작 기소 처벌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의원 ‘선당후사’ 대승적 결단 당 지켰다

최고위원 3명 출마 사임에도

전남지사 포기 자리 지켜

비대위 전환 등 최악혼란 막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대신, 당을 지키는 ‘선당후사’를 선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무더기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당직 출사퇴로 극심한 혼란이 우려됐지만 “서 의원이 대승적인 결정으로 당을 지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지난 3일까지 지도부를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서울시장)·한준호·김병주(이상 경기지사)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사임했고, 전남지사 출마가 예상됐던 서 의원은 최고위원 직을 유지했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선출직 최고위원과 및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의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

대위 체제로 전환하지만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났고 서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면서 최악의 혼란은 막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일체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호남 예산안 행거기에 몰두하면서 당내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동료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지난 1일에도 서 의원은 신상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외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도 무분별한 다선의원들

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최고령 국회의원인 ‘정치 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5선) 국회의원이 최근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욕심’에 일침을 가하면서 “광주·전남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광역단체장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선 의원이 자기 정치에 몰두하면서 최고위원도 배출하지 못하는 등 호남 정치는 더욱 힘을 잃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빠져 호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농업의 미래를 바꿀 ‘AI 첨단농산업 콤플렉스’, 섬 주민의 숙원이 담긴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등 서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 3개 군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진보당 광주시당 “정당 독식, 정치 다양성 훼손” 광주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확대 확정안 비판

진보당 광주시당이 최근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결을 두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획정위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와 달리 2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김주엽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4일 논평을 내고 획정위가 남구 다 선거구(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의 의원 정수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 확정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 확정안을 토대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년 초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획정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했다. 광주시 남구·광산구 기초의원에 ‘4인 선거구’가 도입됐다.

하지만, 광산구 2 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환원하고, 남구 다 선거구 역시 인구수 변동 등을 이

유로 3인에서 2인 선거구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 및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3~4인 선거구는 줄어들고, 거대 양당의 의석을 나눠 갖기 유리한 2인 선거구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

고 진보당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가 결의하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대선거구 확대’를 특별결의문에 담았으면서도, 정작 결과물은 2인 선거구 중심의 과거 회귀를 택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뜨려야만 광주 정치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올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유희를 따지는 섹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광주 정치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확정안을 바로잡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광주시의회에 촉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직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는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경고와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이후 김 비서관 스스로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직접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